

마을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다

「 마을의 내일 」

마을의 미래,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으로



마을연구소 정기석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13]

‘토건적 마을 만들기’에서 ‘사회생태적 마을 살리기’로

- ‘한국형 농촌마을 만들기’의 출구전략



* '내발적 으뜸마을 만들기'의 선도 사례지 진안군



* 대안기술센터, 대안학교, 마을 기업으로 돌아가는 산청 갈전리 민들레공동체마을



* '마을시민, 마을기업, 살림마을'과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을 연구하는 무주 북창리 마을연구소

박근혜정부는 '제2의 새마을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함께 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다. 사업을 지원하려고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까지 발의해놓았다. 지난해 8월, 농식품부에서 법안을 만들어 여당의 의원입법 형식을 빌리고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지자체·민간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되는 마을만들기에 대해 일관된 원칙 및 방법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농정 책임자인 농식품부 조차 “농어촌정비법 등 기존 법률은 사업시행에 관한 절차·방식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마을만들기 지원 내용은 미미했다”고 반성하고 있다. 또 “국내외 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체계도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마을만들기 적용이 일부 지자체 장의 관심과 의지에만 의존하는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반성한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의 효과성·형평성 증대를 위해서도 법제화는 필요하다”고 굳게 다짐한다. 한마디로 “도시에 비해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농촌에 적용 가능하도록 농촌마을만들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게 핵심 입법 취지이자 목적이다. 말은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마을 만들기' 판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하다. 법이 만들어진다고 한국 농촌마을만들기의 고질적 난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법 이전에,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문제, 조직의 문제가 더 본질적인 병인이라는 비판이다.

이는 곧 이른바 마을만들기의 3대 주체인 ‘행정, 주민, 전문가’의 문제로 집약할 수 있다. 일단 행정은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에 임하는 진정성과 지원역량이 미흡하다. 주민은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내발적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행정과 주민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역할의 전문가 집단마저 전문성부터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사업체로서 수지타산을 맞춰야 하니 현장에서 성실성과 진정성을 놓치는 경우도 다반사다. 심지어 농촌에 대한 지식도 애정도 없는 비전문업체들까지 전국의 입찰판마다 기웃거리는 비정상적인 형국이다.

게다가 한국 농촌마을만들기의 문제는 정책모델과 사업구조에서 태생적인 한계도 안고 있다. ‘마을 만들기’를 ‘농촌관광지화’ 또는 ‘생태공원화’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짙다. 그 결과, 외부인(도시민 체험객, 선진지 견학단, 공무원 시찰단 등)의 구경거리나 체험거리에 불과한 관광지, 공원 등이 전국 도처에 양산됐다. 하드웨어 조성 위주의 토건사업의 저열한 수준에 그치고 만 것이다. 본디 마을은 관광지나 공원이 아니다. 관광지나 공원이 되어서도 안 된다. 마을주민들이 대대로 생활하고 생존해온 생활공간이다. 순정한 삶의 터전이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의 법과 제도를 거론하기 전에, 개념과 패러다임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기왕의 ‘토건적 마을 만들기’는, 내부인(원주민, 귀농인, 출향인 등)의 생활과 생존을 보장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생태적 마을 살리기’로 패러다임과 방법론을 바꾸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마을기업 중심의 마을살리기’, ‘살림마을 목적 마을살리기’, ‘중간지원조직 기반 마을살리기’가 합리적이고 실천적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오늘날 한국의 농촌마을만들기는 이미 피로의 임계점을 넘어 위기의 막바지 국면에 도달했다. 새로운 기력과 활로를, ‘사회생태적 농촌마을살리기 출구전략’으로 회복해야 한다.

1. ‘한국적 농촌마을 만들기’는 ‘새마을운동’이 파행과 왜곡의 원죄

한국의 농촌마을만들기는 1970년대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의 개발지향적 ‘새마을운동’으로 본격화됐다. 오늘날 관과 외부 주도 토건사업 위주의 파행적이고 왜곡된 ‘마을만들기 방법론’의 원죄가 여기서 비롯됐다. 1980년대 들어 농촌정주생활권 개발, 농공단지 등 농촌공업화, 소도읍 활성화 등 공업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1990년대는 농지제도 폐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농촌지역 난개발의 역사로 점철된다. 비로소 2000년대 들어 국토균형발전, 상향 공모식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전향적 정책이 도입되었다.

그동안 농식품부를 비롯해 안행부, 문화부, 환경부 등에서 각종 농촌지역개발 관련 사업을 상품처럼 양산해 보급했다. 하지만 부처 간 헤게모니 다툼, 중앙과 지방의 불협화음, 행정과 주민의 갈등만 야기하며 과행과 시행착오의 사례가 난무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발’이라는 교조적인 관성과 관행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2012년까지 읍소재지는 84.4%, 면소재지는 15.9%, 마을은 11.2%의 지역에서 각종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13년에도 117개 시·군에 대한 포괄보조사업으로 9,182억원의 지원예산을 편성·집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농촌마을만들기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전망도 불투명하다. 2010년 기준으로 20호미만의 과소화마을은 전국적으로 총 3,091개에 달한다. 전체 농촌마을(36,496개)의 8.5%를 차지한다. 곡물자급률은 22.6%에 그친다. 주곡인 쌀을 제외하면 4%대로 급락한다. 이렇게 오늘날 한국의 농촌마을은 뒤로는 ‘농정 실패’, 앞으로는 ‘전망 부재’라는 이중의 장벽에 가로막힌 진퇴양난의 형국에 처해있다.

우선 농촌마을만들기 문제의 가장 유력한 발원지는 단연 ‘행정’이다.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권리와 책임이 온전히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등 중앙정부나 각급 지자체 등 행정은 농촌마을만들기의 본질적, 궁극적 목적과 목표가 ‘공동체 활성화’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방심하고 학습과 통찰을 게을리 해 다소 간과했을 수도 있다. 그로인해 그동안의 농촌마을만들기는 공동체활성화 보다 생활기반 개선사업 위주의 개별단위 사업에 치중했다. 목적과 수단이 서로 괴리되거나 전도되어 있었던 셈이다. 수단은 왜곡되고 목적은 상실되었던 것이다. 물론 농촌마을 현장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역량과 방식도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이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행정의 농촌마을만들기 정책의 방향과 좌표가 애초부터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은 2000년대 접어들면서 농촌지역개발을 주민 주도의 상향식 개발로 전환하는 등 자구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변화가 없었다. 여전히 주민 주도가 아니라 공공 주도로 마을사업 현장이 움직인 게 사실이다. 현장에서 주민의 참여와 역할이 행정에 밀려 제한적이거나 주변적일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여건에서 사업에 대한 마을 내 협의나 공감대 형성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는 법이다. 결국 행정은 사업추진과 사후보고가 용이한 물리적 환경 개선사업에 편향되었다. 와중에 시설운영 등 사후관리, 후속·연계 지원사업을 따로 챙길만한 여력과 창의력은 거의 없었다.

농촌마을만들기사업이 2년 안팎의 단기사업 위주로 설계되고 집행된 것도 문제다. 지자체장의 교체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연속성이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기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부재한 상태로 단위사업

형태의 단기사업이 되풀이 되었다. 사업비를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존해 지역별로 독자적, 자율적인 사업을 계획하거나 추진할 수 없는 것도 한계였다. 지역 내부에서는 자율적, 창의적 사업을 추진하라는 포괄보조제도의 도입 취지에 무색하게 시·군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했다. 그저 기존사업이나 타 지역의 유사사례를 모방하고 답습하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사례가 만연했다.

중앙이나 지역이나 행정 하부에서는 건축, 농정, 도시, 주택 등 각 부서마다 사업이 분산 추진되었다. ‘행정 칸막이’로 인한 비효율과 불통의 여지가 상존하는 구조다. 농촌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의 총괄·기획 기능과 전담부서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행정에서 위원장 등 일부 주민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았다. 행정편의를 우선하다 마을주민 간 갈등과 공동체 붕괴 빌미까지 제공하기도 했다.

2. 준비되지 않은 ‘마을주민’과 역량과 책임감이 부족한 ‘전문가’

‘주민’들이 미처 마을공동체의 사전 준비와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마을 관련 사업이 선정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마을이 공동사업으로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으려면 최소 몇 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주민은 학습하고 훈련하면서 그동안 교육, 컨설팅 등 행정이나 외부 지원조직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전무한 마을에 수십억원 규모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종합정비사업)이 난데없이 지원되는 사례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심지어 한번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마을이 여러 부처의 다양한 사업을, 그러나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받는 사례도 많다. 애초 준비되지 않은 주민은 감당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는 사업이다. 실패가 불을 보듯 뻔한 시행착오가 전국 도처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과 주민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대신 해결해야 할 ‘전문가’의 역할과 성과도 만족스럽지 않다. 행정과 주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2004년 최대 100억원 규모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농촌지역개발관련 전문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해 전문가의 개념과 관련 컨설팅시장이 교란되는 양상마저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컨설팅업체 등록제, 국가 공인 농어촌개발컨서턴트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도 없고 시장 진입 문턱도 여전히 낮다. 컨설팅업체의 역량 강화 유도와 시장 공정질서 확립 효과는 미미하다.

심지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다보니 일을 잘 할 수 있는 업체보다 입찰경쟁에서 이기는 기술과 방법론이 뛰어난 업체들이 선정되는 경우도 피할 수

없다. 그저 제안서나 보고서를 기계적으로 찍어내 전국의 입찰 판마다 기웃거리는 자격미달, 함량미달, 도덕성 미달의 사이비 업체들마저 버젓이 횡행하는 지경이다. 이런 업체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전문성과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로 홍보, 마케팅, 디자인, 정보화, 일반산업, 중소기업 등 그동안 농업이나 농촌이라는 화두와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해오던 비전문적인 업체들이라는 점이다.

이른바 농촌마을만들기라는 일은 속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의, 삶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과 이해를 갖추어야 수행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업무다. 생태, 환경, 조경, 관광, 건축, 도시계획, 농학, 임학, 식품공학, 농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촌사회학 등의 지식과 역량이 통섭되어야 한다. 물론 학교 안에서의 학점과 학위보다는 학교 밖에서의 현장 경력이 더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전에 농업과 농촌, 무엇보다 농민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소명의식이 없으면 능히 감당하기 어려운 직종이다. 법안으로 발의된 국가공인 전문자격 증제도 외에 기관 인증제, 인증기관 3진아웃제 등을 도입해 농촌지역개발컨설팅 시장의 정도와 정의를 세울 필요가 있다.

3. ‘한국형 농촌마을 만들기’의 선도지에서 엿보는 가능성

그나마 '한국형 농촌마을 만들기'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선도사례는 관과 민이 협치하는 민관거버넌스형 지역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전북 지역이 활발하다. 비록 관 주도일망정 광역지자체 차원의 전담 중간지원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전북의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단연 진안군의 마을만들기는 눈에 띈다. ‘내발적’ 이 화두다. 주민이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을 사업화하고 주민역량에 맞춰 단계별로 사업을 지원한다. 행정은 주민들이 만든 계획서를 검토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안해 군 자체사업이나 정책사업을 해당 마을에 유치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진안군 자체예산으로 소규모 사업을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수마을로 평가받은 마을에는 중앙정부의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그린빌리지에서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로, 그리고 으뜸마을가꾸기, 국·도비사업으로 사업규모와 난이도가 높아진다.

마을간, 단체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도 특징이다. 개별 마을 단위 사업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를 구성, 정보 교류, 지구별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귀농인을 마을간사로 활용하는 것도 진안군의 아이디어다. 이를 보고 중앙정부에서 마을사무장 제도를 개발했다. 2007년 2월부터 행정 내부에 ‘마을만들기지원팀’ 전담조직을 두고, 2012년말에는 ‘마을만들기지원센

터’라는 밀착지원형 중간지원조직도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 책임자는 외부 민간전문가를 특채해 맡기고 있다.

완주군의 마을만들기는 커뮤니티비즈니스(C.B.) 중심이다. 사업의 마스터플랜은 애초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끌던 희망제작소의 기획에서 비롯되었다. ‘완주지역경제순환센터’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실행 주체들과 행정주체, 지역사회 단체들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삼기초등학교 폐교를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리모델링했다. 마을회사육성센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로컬푸드센터, 도농순환센터, 공감문화센터 등 5개 지원조직이 활동 중이다. 이곳에서 완주군의 정책을 현장에서 주민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을 추진하고 현장의 필요를 정책에 피드백한다. 중간지원조직 본연의 역할이다. 완주군은 ‘농촌활력과’를 신설하고 순환보직제가 아닌 전담공무원을 고정 배치해 정책과 예산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등을 위한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2007년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희망제작소, 2012년에는 서울시와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북의 뒤를 충남이 지근거리에서 뒤쫓고 있다. 2011년부터 안희정도지사가 주도하는 3농혁신 5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충남형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충남도의 행정 리단위 전체마을 4천5백여 곳이 대상이다. 마을을 개선하고 혁신하려는 지역주민의 의지와 사업추진 현황이 중요하다. 그에 따라 마을공동체사업 경험의 전무한 일반마을에서부터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 등 4단계로 분류한다. 단계별, 맞춤형 마을만들기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다. 2014년까지 9백개 마을을 대상으로 소득증대와 경관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시설투자를 위주로 돈을 쓰는 여느 농촌마을만들기 사업과는 접근방법부터 다르다. 직접적인 마을만들기 보다 ‘사람 만들기’에서 출발한다. 마을당 12백만원의 사업비 중 5백만원은 주민역량강화 교육, 7백만원은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 마을만들기 이해와 학습에 전적으로 선행 투자하는 방식이다. 결과보고서를 평가해 준비된 마을, 잠재력과 가능성이 확인된 마을에 한해 선별적으로, 그러나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급적 관의 간섭과 통제를 경계하는 순수 민간 주도형 사례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홍성 홍동면의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가 모범적이다. 홍성군의 마을만들기는 뿌리가 깊다.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와 ‘문당리 마을발전100년계획’으로 대변된다. 1958년 개교한 국내 대안학교의 효시, 풀무학교는 마을공동체 정신을 창조하고 마

을공동체사업의 일꾼을 생산한다. ‘문당리 100년계획’은 2000년 풀무학교 출신 마을지도자 주형로 정농회 회장의 노작이다. 문당리 마을주민들과 뜻을 모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용역을 발주해 수립한 일종의 ‘마을만들기 설계도’다. 무엇보다 정부의 보조금이 아닌, 오리농법으로 생산한 친환경쌀 판매대금 일부를 모은 마을기금으로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풀무학교의 교훈처럼 ‘위대한 평민’들이 이룬 당당한 성과다.

현재 홍동면에는 농업 및 가공, 농촌관광, 교육, 문화, 공동체, 에너지 등 50여개의 마을·지역공동체사업 관련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문당리, 윤월리를 중심으로 귀농인을 포함한 마을주민들이 주도하는 이런 다양한 민간조직이 홍동면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원동력인 것이다. 이들이 자생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오늘날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생태계)의 모습으로 진화했다. 특히 2011년 4월에는 순수 민간주도형 중간지원조직 ‘지역센터 마을활력소’도 자체적으로 설립했다. 홍동면 농촌마을만들기 일은 홍동면 주민의 머리와 손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결기를 실행한 것이다. 홍성군에서는 2011년 10월 ‘친환경농정기획단’을 설치하고 농식품부 출신의 민간전문가를 영입해 군 단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고 노무현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방문해 화제가 되었던 단양의 한드미마을도 ‘교육 중심 복지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마을지도자 또는 마을경영자 정문찬씨가 있다. 부산지역에서 운수노조 활동가로 일하다 귀향해 농민운동가로 변신한 경우다. 모교인 대곡초등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유학센터를 시작한 게 주효했다. 2012년말 현재 초등 35명, 중등 10명의 아이들이 산골마을에 유학중이다. 마을공동식당 등 마을공동체사업의 운영주체인 ‘한드미유통영농조합법인’에는 초임 월급여 170만원 이상의 상근자가 15명 근무하고 있다. 마을공동체사업을 주도하고 책임지는 마을기업의 표본이다. 지금 한드미마을이 준비하고 있는 다음 단계의 마을공동사업은 마을양로원이다. 농촌유학센터의 아이들과 마을양로원인 ‘공동생활주택’ 호스피탈리티움 ‘의 노인들이 서로 보살피며 공동생활하는 복지농촌을 실천하겠다는 계획이다.

4. ‘한국적 농촌마을만들기’는 ‘마을 살리기, 마을 살이’가 되어야

근본적으로 외부인을 위한 토건사업 ‘마을 만들기’는, 내부인을 위한 생활문화사업 ‘마을살리기, 마을 살이’가 바뀌어야 한다. 그러자면 법과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 ‘토건적 마을만들기’의 대안이자 출구전략으로 상정하고 있는 ‘사회생태적 마을살

리기'의 실천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마을기업 중심 마을살리기', '중간지원조직 기반 마을살리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제화는 필수적이다.

먼저 관련 정부지원사업 연구나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최적가입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최저가 낙찰제'를 고수하고 있다. 출혈경쟁과 부실용역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 '마을기업' 중심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기존의 의사결정구조에 불과한 위원회(추진 및 운영) 중심의 마을사업 수행방식은 실행주체 및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한계와 폐단이 있다. 마을공동체사업의 실행조직의 실체를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법적으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인격을 갖춘 '마을기업'을 설립한 마을에 한해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

만연하는 컨설팅업계의 구조악도 근절되어야 한다. 오늘날 마을만들기 컨설팅 시장은 오로지 사익을 추구하는 상업적 민간 사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다. 출혈경쟁, 부실시행 등이 난무하는 파행적인 컨설팅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수행역량 제고가 시급하다. 따라서 공익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성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별 중간지원조직'이 컨설팅 업무를 전담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때 기존의 민간컨설팅기관이나 전문가들은 지역별 중간지원조직과 협업조건에 한해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현행 농촌지역개발컨설팅 등록제를 인증제로 강화하고, 인증 후에서 '3진아웃제' 등 철저한 사후관리도 요구된다.

수많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과물이 전국 도처에서 유희시설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도 심각하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농어촌공사는 2011년까지 준공된 89개 권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하드웨어 운영 실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50%에 달하는 시설물이 폐쇄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칭)농촌지역 유희 공유자산 기반 도농상생 공동경영제 시행'을 제안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국 농촌마을만들기 현장에 조성되었으나, 사실상 방치된 유희시설을 활용할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이렇게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되었으나 활용·가동되지 않는 전국의 유희시설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마을주민의 노력이나 역량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사업 및 시설 경영능력을 갖춘 귀농촌인 등 도시민들이 마을 원주민들과 유희시설을 기반으로 공동경영하는 도농상생형 마을공동체사업이 전향적 해법이 될 수 있다.

정책적 측면의 고민도 더 심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우선 농민생활 측면에서 농촌지역의 생활거점 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오늘날 농촌마을은 여전히 상하수도, 커뮤니티시설 등 기초생활 서비스의 정비와 보강이 절실한 상태다. 최근 농어촌마을 리모

텔링 특별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주택 등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향적으로 ‘농촌마을들의 근린생활 서비스 거점이자 경제적 지원거점,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 거점’으로서 농촌 중심지(예: 읍·면소재지)의 정비 또는 공간 재설계가 필요하다. 가령 농촌경제연구원은 “140개 농촌 시·군 당 3~4개의 소생활권 테마로 규정하고 설정한 중심지 500개 육성”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농촌복지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확산과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 서비스 공급 주체를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자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야 한다. 이때 조직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지역주민들의 협동과 연대를 통한 사회 경제적 경영체가 지속가능할 것이다. 이같은 농촌지역의 복지서비스 확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농식품부, 복지부, 교육부, 문화부, 노동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들의 다각적 연관 지원정책이 개발, 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농업가치 측면에서는 '중소농 중심의 협동조합형 6차산업화 등 ‘농촌형 산업’을 개발하고 육성해야 한다. 오늘날 농촌은 농업의 비중이 감소되고 제조업, 사회서비스업이 확대되는 추세다. 농촌의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귀농인구 증가, ICT 산업 발달, 농촌 유무형 자원 가치 재발견 등으로 인해 이른바 ‘농촌형 산업’, ‘농촌형 일자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서비스가 유기적이고 융복합적으로 결합된 6차산업이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도할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소농 중심의 협동조합형 6차산업화 방식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기업 주도, 농협 주도의 농산업화 정책은 근본적으로 한계와 문제가 있다는 교훈은 이미 충분하다.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해야 한다. 마을만들기 등 농촌공동체사업은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주인인 마을주민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 참여해야 마땅하다. 그러자면 마을주민이 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부터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소통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민관거버넌스형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하는 게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진안, 완주, 홍성 등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의 중심에는 '사람'이 먼저, 충분히, 다양하게 놓여야 한다. 농촌마을에는 일단 일을 할 사람이 없다. 있어도 고령의 농사기술자들 말고는 없다. 지역 내부의 인적자원만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역부족이다.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주민역량강화 사업도 한계가 있다. 전문가, 귀농인 등이 외부에서 유기적이고 상시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부족한 내부역량도 보완하고 새로운 인력도 지역으로 수혈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마을만들기 핵심주체인 지역 인

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귀농촌인 등 지역의 새로운 구성원을 활용해야 한다. 또 외부의 전문가 및 조직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내부의 역량강화든, 외부의 지원이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필요가 있다. 진안군과 완주군의 사례와 같이 전담부서·중간지원조직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방법이다.

[표] ‘마을 살리기’를 통한 ‘살림마을’ 모델

분야	사업과제		사업내용
경제 마을	마을기업	마을농장	친환경임산물생산사업(1차)
		마을공장	고부가임산물가공사업(2차)
		마을가게	도농직거래유통(3차): 현지직판장->마을시장 및 LocalFood시스템연계/확장
		마을공원	도농교류 체험관광 사업(3차 → 6차)
	마을시장	마을은행	노동력매개마을화폐(Lets)발생 및 거래 → 대안금융기관
		마을장터	현물, 상품, 인력(품앗이)시장
생태 마을	마을R&D센터	마을발전소	태양광, 열, 바이오매스,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마을연구소	친환경농사, 생태건축, 농촌R&D 등 농업 및 농촌지역 연구 및 활용
	마을체험캠프	산촌캠프	산촌체험, 임업체험, 산촌공동체생활체험, 산촌역사문화체험 등
		자연캠프	산골체험, 하천체험, 경관답사체험 등
교육 마을	마을학교	어린이학교	산촌유학, 방과후학교 등 유소년 ~ 청소년대상 대안교육 프로그램
		어른학교	교사학교, 지역학교 등 성인대상 지도자교육 프로그램
	마을학원	마음학원	마음공간(명상), 생각공간(문학) 등
		몸학원	몸짓공간(춤), 손짓공간(궁방,그림), 소리짓공간(노래) 등
생활 마을	마을생활원	마을펜션	마을식당/Café, 게스트하우스 등
		마을회관	마을공동 편의시설(빨래방, 찜질방, 목욕탕) 등
	마을문화관	마음문화관	마을도서관, 마을박물관 등
		몸문화관	마을공연장, 마을출판/신문사 등

5. ‘마을시민’이 함께 하는 ‘마을기업’ 을 중심으로 ‘살림마을’ 을

이른바 ‘마을 만들기’ 등 마을공동체사업에서는 조직이 가장 중요하다. 혼자서는 결코 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한둘이 나서서 계량적 성과를 보이는 경우도 간혹 보고되는데 그건 개인사업이지 공동체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사업의 책임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이때 마을기업을 세우고 꾸릴 ‘훈련된 마을시민’ 이 함께 준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거기에 마을기업의 창업

과 경영을 지원하고 마을시민들을 발굴하고 교육할 ‘체계적인 중간지원조직’도 지역마다 든든히 자리잡아야 한다. 이렇게 마을시민과 마을기업을 통해 일구는 마을은 ‘살림마을’의 모습을 띠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사람으로서 능히 살아갈만한 마을’을 말한다. 그러자면 이제 ‘마을 만들기’라는 무모하고 공허한 구호부터 고치는 게 좋을 것이다.

아쉽게도 그동안의 ‘마을 만들기’는 농촌관광사업에 집중하면서 농촌을 관광지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들였다. 그리고 건축, 토목, 조경 같은 하드웨어 구축 기술을 통해 농촌을 공원화하는 데 집중했다. 마을을 체험거리나 구경거리를 만드는 ‘마을 만들기’로는 날로 붕괴되고 공동화되는 우리 마을을 활성화하거나 재생할 수 없다.

이제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토건적 마을 만들기’ 방법론에서 벗어날 때다. 오히려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인문적인 방법론들을 정립해서 융·복합적으로 결합해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말그대로 ‘마을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살림마을’로서 ‘사회생태적 마을 살리기, 또는 ‘마을 살이’로 바뀌어야 한다.

확신을 갖고 단언한다. ‘잘 훈련된 마을시민’과 ‘잘 조직된 마을기업’, ‘진정한 전문가집단으로서 중간지원조직’이 없이 ‘살림마을’ 같은 진정한 농촌마을만들기는 가능하지 않다. 설사 요행히, 무모하게 시작한들 반드시 실패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의 마을만들기 역사가 증명하고 남는다. 결국 마을사람도, 마을도 크게 상처를 입는다. 가는 숨을 몰아쉬며 버티던 마을공동체의 뿌리마저 송두리째 뽑히고 만다.

그래서 거듭 힘을 주어 말한다. 마을에는 당부하고 정부에는 제안한다. ‘학습된 마을시민들’과 ‘훈련된 마을기업’이 준비되지 않은 마을에는 아예 마을만들기 같은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러자면 농민이나 원주민만으로는 안 된다. 도시민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 다양한 재주와 특기를 가진 귀농인들이 농촌으로 들어가 마을시민으로 유기적으로, 화학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서로 이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협동하고 연대해야 한다.

정부는 그런 물꼬와 시스템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늙은 농부들뿐인 마을도 비로소 미래지향적인 마을사업의 전망을 제대로 펼칠 수 있다. 정부나 각 지자체의 예산, 정책의지, 실천역량 등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어야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

‘사회생태적 마을 살리기’라야 한다. ‘학습된 마을시민’들이 ‘훈련된 마을기업’으로 함께 꾸리는 ‘사람 사는 살림마을’이라야 한다. 살기 좋은 나라는 결국 살기 좋은 마을들이 모여서 이룬다.

■ [Pressian]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20회 연재 전문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2644>

■ 연재 서문 :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연재를 시작하며

우리 농업, 농민, 농촌의 살 길은 크게 세 갈래 정도로 보인다. '농정의 3대 패러다임 전환'으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한다. 우선 정책이나 전략 이전에 농정의 패러다임부터 바뀌어야 한다.

생산자인 농민만의 고립된 농업에서 우선 벗어나야 한다. 소비자이자 국외자인 국민들도 함께 농정책임의 주체로 동참해야 한다. 농업의 판을 '국민농업, 또는 협동경제사회형 농업'으로 갈아야 한다.

또 농업은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대접받아 마땅하다. '공익농업, 또는 국가기간산업형 농업'으로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 오늘날 초국적자본이나 세계열강과 자유무역전쟁은 승산이 없다. 농민은 물론 국가로도 역부족이다. '지역농업, 또는 유기순환형 농업'으로 지역공동체를 자급자족해야 한다.

정책의 기조도 전환해야 한다. '농정의 4대 정책기조'를 새로 다져야 한다. '사회민주적 농민' 정책으로 소득의 양 보다 복지 등 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 빛이 빛을 낳는 한계농, 돈 놓고 돈 먹는 상업적 투기농이 아닌 '사회경제적 농업'이 기본이자 주류가 되어야 한다. '사회생태적 농촌' 정책으로 농촌다운 농촌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농민생활이 행복하고, 농업경제가 돌아가고, 농촌문화가 아름다운, '사회혁신적 3농공동체'를 재생할 수 있다.

이같은 농정 패러다임과 정책기조 위에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의 실천해법을 제안한다. 귀농촌, 농촌복지, 농민운동, 공익농업, 여성농민, 6차농산업, 기업농, 먹거리 정의, 농산물 유통, 친환경농업, 농촌교육, 협동조합, 마을공동체사업, 농정협치, 에너지자립, 식량주권, 농정재정, 도시농업, 농협, 지역개발 등의 해묵은 숙제들이다. 오늘날 우리 농정의 존재감은 인구수로나 GDP로나 예산으로나 고작 5% 정도에 불과하다. 5% 짜리 농촌의, 농민에 의한, 농업을 위한 한계농정, 고립농정으로 안 된다. 노동자를 비롯한 나머지 95% 도시민, 국민들과 서로 협동하고 연대하는 대안국민농정이라야 한다.

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합의를 상호호혜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생산자 농민은 소비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소비자 국민은 생산자 농민의 생활을 지키는 상생의 약속을 해야 한다. 그래야 식량주권과 국가주권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서 100% 지킬 수 있다.

"협동과 연대의 힘으로, 농민과 국민이 모두, 함께 살자!"

■ 연재 목록

1. [농민] '귀농촌'의 협동연대 대안 - 도시난민에서 '마을시민'으로
2. [농민] '농촌복지'의 사회적 서비스 해법 - 100세시대 '협동사회경제형'으로
3. [농민] '농민운동'의 연대 전략 - '사회연대적' 농민운동으로
4. [농민] '공익농업'의 국가기간산업화 - 공익농민에게 '월급 기본'을
5. [농민] '여성농민'의 가치 - 여성농민에게 '절반의 영농권 소득'을
6. [농업] '6차농산업화'의 정도 - 중소농 중심 '협동화 6차산업'으로
7. [농업] '기업화 농산업'의 대안 - '마을·지역 공동농업'으로
8. [농업] '먹거리 정의'의 중요성 - '농도상생형 사회복지'의 열쇠
9. [농업] '농산물 유통'의 혁신 대안 - 도시민이 책임지는 '농민의 생활'
10. [농업] '친환경농업'의 실천 방안 - '잘 먹고, 잘 사는' 지름길

11. [농촌] '농촌교육공동체'의 전망 - 마을을 살리는 '학교'
12. [농촌] '협동조합'의 사회적 경제 - '을(乙) 중심'으로
13. [농촌] '농촌마을만들기'의 출구전략 - 사회생태적 '마을살리기'로
14. [농촌] '농정협치(거버넌스)'의 가능성 - '한국형 농업회의소'의 법제화를
15. [농촌] '에너지자립마을'의 전환 - '지역순환농업' 기반으로
16. [농정] '식량주권'의 정책목표 - '양적 식량자급'과 '질적 먹거리 안전'
17. [농정] '농정 재정'의 개선 방향 - 중앙집중에서 '지방분권'으로
18. [농정] '도시농업'의 역할 - '국민농업'의 학교이자 전진기지
19. [농정] '지역공동체'의 발전전략 - '지방재정'의 균형부터
20. [농정] '농협'의 개혁 해법 - '경제협동조합'으로 환골탈태를

마을의 미래,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으로부터

- 2014년 6월 -



마을연구초 정기석

1

1. 사회민주적 농민
2. 사회경제적 농업
3. 사회생태적 농촌
4. 사회혁신적 3農 공동체

2

* 한국 농정의 현실과 전망

1. 한국은 주권국가도 아닌데,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는가…?

- TPP의 미국과 일본, RCEP의 중국 사이에 끼어 '베팅, 줄서기 협공' 압박당하는 '박쥐' 신세

3

2. 정부의 '살농정책'을 감당할 '맷집' 또는 '전망' 이 있는가…?

- 이명박정부는 '농업선진화방안', 박근혜정부는 '창조농업=ICT융복합, 6차산업화, 스마트농업, 제2의새마을운동 등)으로 '농민을 들판에서 몰아내려는 살농정책' 기조 지속

* 2014년 예산 전년 대비 1.4% 감소, 공약가계부향 후 5년 5조2천억원 감축, 쌀 변동직불금 예산 1천억원 불용 예산, 허수 계상 등)

4

3. 교통, 에너지, 보건의료, 교육, 주택 등 “국가 경제의 사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산업 ‘농업’의 국유화는 반사회적, 또는 사회주의인가…?

- 농지, 생산기반시설, 농기업 등 농업인프라의 국유화(예: 베네주엘라 차베스정부의 농기업 국유화)

5

4. ‘농민 지위’의 공익요원화 또는 공무원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월급 기본소득제 : 월 50만원(=1인당 국민연금 수령액, 1인 최저생계비)
- 300만 농민 × 월 50만원 = 월 1조5천억원 × 12개월 = 연 18조원(2014년 농림수산물분야 예산 총액)

5

5. 그렇다면, 진보정당이 집권해야만 '농민의 길'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아닌가..., 설사 집권한다해도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명분은 있나?

- 한국 GDP 1,200조원에서 농업생산액은 약 40조원 -> 3.3% 수준, 2014년 정부예산 360조원에서 농업·농촌 분야는 14조원 -> 3.8% 수준
- * 2012년도 매출액, 삼성전자 240조원으로 20%, 현대자동차 85조원으로 7%

7

6.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국민농정', '공익농정', '지역농정'으로 '농정 패러다임 혁신'을 해야!

-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20대 전략의제-100대 실천과제>

8

★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국민’ , ‘공익’ , ‘지역’ 의
3대 농정패러다임으로**

- **국민농정** : 5% 생산자 농민만의 고립된 농업에서 벗어나 95% 소비자 국민들도 농정의 책임주체로 동참
- **공익농정** :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대접받는 국가기관산업의 공익적 지위 보장
- **지역농정** : 초국적자본, 세계열강과 자유무역전쟁에서 승산은 희박하므로, 지역 및 마을공동체 단위로 유기적으로 내부 순환하는 자금 체계와 자립 기틀 구축

9

1. 사회민주적 농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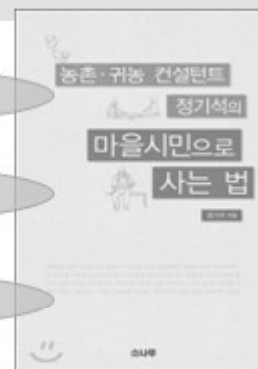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I> ‘귀농촌’ 의 협동연대 대안-도시난민에서 ‘마을시민’ 으로

‘마을시민론’

‘공익농민제’

‘지역주권법(Localism Act)’

<농촌 유희시설 사회적자산은행>



10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2> ‘농촌복지’ 사회적 서비스 해법
- 100세 시대, ‘협동사회경제형 복지’로**

‘사회투자형 지원’ 전환

‘마을공동체사업’ 결합

‘생활문화 S/W’ 개발

<농촌마을 공동생활주력>



11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3> ‘농민운동’의 사회연대 전략
- 사회연대적, 현대적 농민운동으로**

‘도시 노동조합’ 연대

‘농협 개혁’의 주체

‘지역공동체운동’ 주도

<농.노 상생 마을발전기금>



12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4> ‘공익농업’의 국가기관산업화
 - 공익농민에게 월급 기본소득을

‘농업의 국가기관산업화’

‘농민의 준공무원화’

‘농민 기본소득보장제’

<월급형 공익농민제>



13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5> ‘여성농민’의 사회적 가치
 - 여성농민에게 ‘절반의 영농권’을

‘여성농민 공동경영주제’

‘여성농민 공동체사업지원’

‘여성농민 일자리 개발’

<공동경영주 등 여성농민 지위보장 조례>



14

2. 사회경제적 농업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6> ‘6차 농산업화’의 정도
- 6차농산업은 중소농의 협동과 연대로

‘중소농 중심 협동화모델’

‘농촌지역개발사업 연계모델’

‘지자체별 연합경영체 모델’

<중소농 농식품 공동가공센터>



15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7> ‘기업화 농산업’의 대안
- 마을과 지역이 함께 ‘두레공동체 농사’를

‘마을단위 농업공동체’

‘중소농 생산자협동조합’

‘중소농 공동마케팅’

<중소농 주도 생산자협동조합>



16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8> ‘떡거리 정의’의 중요성
 - ‘떡거리 정의’는 사회정의의 필수제

‘사회복지제’

‘식품기부 활성화법’ 개정

‘농민시장 및 농민식당’

<농·도 떡거리정의 연대(네트워크)>



17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9> ‘농산물유통’의 사회혁신 대안
 - ‘농도상생 직거래’, 농민의 버킷리스트 1위

‘Local Food’

‘CSA(꾸러미)’

‘Marketing Board’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8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0> ‘친환경농업’의 실천방안
 - 한반도 전역을 ‘유기농업의 생태해방구’로

‘유기동등성’ 폐기

‘GMO 식품표시제’

‘도종종자’ 보전

<마을/권역단위 유기농순환농업단지>



19

3. 사회생태적 농촌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1> ‘농촌교육 공동체’의 전망
 -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이 사라진다

‘농촌 자율학교’ 지정

‘농촌학교 무상교육’

‘지역사회교육센터’ 확장

<작은 학교 중심 지역교육공동체>



20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2> ‘협동조합’의 사회적 경제
- 자의 반, 타의 반의 선택, ‘한국적 협동조합’

‘농업경영체’ 인정

‘중소기업’ 대우

‘사회적기업’ 지원

<농촌형 협동사회경제 투자기금>



21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3> ‘농촌마을 만들기’의 출구전략
- ‘만드는 마을’에서 ‘사람 사는 살림마을’로

1. 마을시민

2. 마을기업

3. 살림마을

<지자체 단위 마을연합 공동체사업 모델>



22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4> ‘농정협치(거버넌스)’의 전망
 - 농민주권 확보는 ‘협치 농정’으로

‘농업회의소’ 법제화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민간 주도형 농업회의소>



23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5> ‘에너지자립마을’의 전환
 - 에너지 자립은 ‘주민참여와 상향식’으로

‘지역농업 연계 모델’

‘생태건축 연계 모델’

‘생태경관 연계 모델’

<적정,대안기술센터>



24

4. 사회혁신적 3農 공동체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6> ‘식량주권’의 정책목표
- 식량주권 없으면 국민 절반은 굶어야

‘식량자급률’ 법제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공공비축제’

<기초농산물 지자체 수매제>



25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7> ‘농정재정’의 구조
- 예산을 삭감하는 ‘기만적 창조농정’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문제

‘과대포장 허수’ 문제

‘지역균형’ 문제

<지자체형 통합 직불제>



26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8> ‘도시농업’ , 국민농업의 학교
- 도시빈곤과 농촌소외를 퇴치할 수**

‘유희지’ 실태 조사

‘도시농업 거버넌스’

‘농·도 교류네트워크’

<공영 도시농업공원>



27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9> ‘지역공동체’의 균형발전전략
- 지역공동체는 ‘새마을운동장’ ?**

‘지방재정’ 안배

‘주민참여 및 자치’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
지역공동체 100년 계획’

<지역 협동사회경제 공동체 생태계>



28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20> '경제농협' 혁신방안
 - 중앙회장 직선으로 농협을 농민에게

'지역농협' 민주적 운영

'조합원' 조건 강화

'경제사업' 집중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29



마을연구소

연구소장 정 기 석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전북대 농촌사회학 박사과정/시인)

▶ 주소: 전북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322

▶ 전화: 010-9237-0904

▶ e-mail: tourmali@hanmail.net

▶ 홈페이지: <http://cafe.daum.net/Econet> (오래된 미래마을)

▶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chungkisuk>

30